

第276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7號

國會事務處

2008年7月21日(月) 午前 10時30分

議事日程

1.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附議된案件

1.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1
- o 비교섭단체(친박연대) 대표발언 1
1.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4

(10시44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구기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친박연대) 대표발언

(10시45분)

○의장 김형오 오늘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친박연대)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박연대 원내대표이신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친박연대를 대표해서 무거운 마음으

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친박연대는 총선 이후 가혹한 표적 수사를 당하며 필설로 형용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논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과 관련한 얘기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는 살인적인 고유가와 고물가의 경제 위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4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파동은 본 의원이 현안질문에서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 현실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4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권의 정체성을 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한 명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군이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남한의 선량한 민간인을 공포탄 경고도 없이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최소한의 사과와 사후 대책은커녕 사건의 진상을 조작 왜곡하고 감추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 관광객이 무참하게 피살당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년여에 걸쳐 과거 진보정권에서 무리하게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을 때 사고는 예고됐던 일입니다. 즉 금강산 관광은 애초부터 기형적인 논리와 모순으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하던 민간인이 24시간 억류되기도 하고 안전사고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도 없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남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고 박왕자 씨 총격 피살 사건의 책임이 남한에 있고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남한에서 세우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에 내부 사태가 발생해 금강산 관광객을 인질로 잡았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구출해 낼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을 때 그 명분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수익사업이며 경제 논리에 따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자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금강산을 수학여행 할 때 1인당 23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 보조금이 2005년에만도 62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관광객 1인당 2박 3일에 80달러의 입장료를 북한 당국에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가게를 쥐어짜서 낸 세금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지원되는 돈을 우리 내부의 서민 생계를 도와주는 데 먼저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래도 대북사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말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북사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인도적 지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북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경제 논리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보고 북한이 이 시점에서 이처럼 무고한 민간인을 왜 조준 사살하는 도발을 일으켰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10년 만에 들어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내정을 간섭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고 남한 내 여론을 혼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입니다.

총격사건은 5시경 발생했고 현대는 9시 20분에 통보받아 11시 30분에 통일부에 알렸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으로 이런 긴급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 무려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의 총성이 전쟁 도발이었다면 9시간이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기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행한 국회 연설에서 예정대로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의를 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대북 대화 제의를 준비했으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미루겠다고 밝혔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정부의 위기 대응이 얼마나 미숙한지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북 대화 제의를 한 지 24시간도 채 안 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제안을 통일부가 반대한 셈이지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부를 국

민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란 말입니까?

청와대는 보고 지연과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경위를 따져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 관계자를 즉각 문책하여야 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도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998년 민간 교류를 통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화두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올 6월 말 현재 누적 관광객 수가 194만 6000명에 이르고 개성 관광에는 올 상반기에만 6만여 명, 개성공단에는 우리 민간인 근로자가 수천 명이나 되지만 이를 보호할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진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이 차제에 개성 관광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04년 1월 29일, 남북 간 ‘금강산·개성 지구 체류 및 출입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그 합의에 의거 남북공동위원회가 즉각 구성돼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예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서해교전을 북한이 발발한 이후 월드컵 4강의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던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을 도발했고 급기야는 민간 관광객을 총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 친박연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화하고 협력한다고 해서 자국민에 대한 이런 테러를 그냥 용인하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지탱하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이자 결코 비굴한 타협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의연한 대북정책을 통해서만 실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박연대는 국민과 함께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때까지 금강산 관광은 물론 개성 관광도, 다른 대북 지원도 즉각 중단하고 남북정상이 만나 모든 남북 간 합의사항을 재협상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독도의 영토 주권을 꼭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학교 사회교과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어코 독도 영유권 문제를 파렴치하게 포함

시켰습니다.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영토 주권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국민과 함께 저희 친박연대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실록 등 우리 역사에 근거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뒤에 영구적으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 아닙니까?

국내외의 각종 고서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고증된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마당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필시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을 보면 영토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분쟁을 우려한 조용한 외교만을 강조했고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실망만 주더니 드디어 뒤통수를 얻어맞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는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성인까지 나서서 일본의 망령에 울분을 터뜨리고 촛불시위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자성하고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아울러 독도를 유인도화 해 상용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관 합동기구를 만들고 해외 홍보와 정보 수집을 위해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와 같은 단체를 지원하고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토 주권적 권리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독도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속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친박연대는 국민과 함께 역량을 모아 독도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내실화해서 일본의 우리 국토 침탈 야욕을 분쇄하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바로잡고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독도에 해군병력의 상주 주둔을 즉각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유가에서 촉발된 경제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였던 4.4%보다 낮은 3.9%대로 내려 잡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처음 예상치인 3.1%보다 무려 2.1%나 높은 5.2%로 전망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된 489개 품목 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52개 품목을 별도로 산출한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114.7을 기록해 지난해 6월 106.4%에 비해 7.7%나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상한선인 3.5%를 두 배나 넘는 수치입니다.

국제경제의 흐름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현실을 외면한 고환율 정책의 여파로 물가상승의 충격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7% 성장률 달성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경제팀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차관의 대리경질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장관의 경제정책이 국가 경제의 신뢰 상실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현 경제정책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제헌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끊임없는 도전과 불굴의 노력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근대화과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만개시켰습니다.

이제 환갑을 맞이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수고하셨습니다.

1.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11시03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

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평택갑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망동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 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노력과 진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신뢰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고지도 박물관인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의 동영상 통하여 독도가 동서양의 여러 지도에 우리나라의 땅으로 명확히 그려져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양에 의한 우리나라의 지도는 16세기 중반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이때의 지도는 길쭉한 반도의 모양이나 둥그런 섬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18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이 정형화된 반도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울릉도와 독도가 서양 고지도에 등장한 시기는 18세기 중엽으로 발견자와 선박 등의 이름으로 차차타오, 리앙쿠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지도는 1737년 프랑스 지도제작자인 당빌이 제작한 '조선왕국전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중국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명령으로 예수회 선교사에 의해 제작된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한 서양에서 발행한 최초의 독립된 한

국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한국 땅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독도 침탈사건에서 보면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자기네들의 논리를 야금야금 전파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 국제분쟁지역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막고자 조용한 외교를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 소위 조용한 외교는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문부과학상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처음 말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일본의 문부대신이 2005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8년 3월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유철 의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의하면 독도를 리앙쿠르로 표기한 사이트가 3년 전에는 2만 2000개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개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7월 현재 약 3만 8000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교부로서도 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여 독도 표기 오류 시정을 위해서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유철 의원 그리고 지금 7월 현재 3만 8000개가 아니라 4만 10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조용한 외교를 말하면서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숨죽인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고 우리 국토에 편입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독

도 수호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유철 의원 하여튼 외통부에서는 더 적극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원유철 의원 현재 일본과는 최근 6자 회담에서의 협력 문제, 그리고 외무장관회담, 총리 답방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독도 표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서틀외교 중단을 포함해서 향후 모든 외교 일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의 우리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에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는 양자 차원의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 차원의 외교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자 차원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반 상황을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유철 의원 요미우리 오보 사건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 요미우리신문은 7월 9일 양국 정상간 환담에서 일본 측이 다케시마 명기 방침을 밝히자 우리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였고 요미우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한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당국에 대해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요미우리의 보도가 있는 날 일본의 외교성 사무차관 그리고 일본 외교부의 대변인은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의 주일대사대리가 요미우리신문사를 방문하여 강

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미우리신문사는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아울러서 이 사실과 다르다는 우리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총기피격사건이 청와대에 최초로 접수된 이후에 국회 연설을 앞둔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무려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초로 보고받고 합참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사로 혼선을 빚기까지 하였습니다.

독도 기술 문제도 3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인데 사태가 터지자 뒷북만 치면서 허둥지둥 수습하기 바쁜 형편입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 금강산·독도 문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우리 정부에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있거나 한 것인가라는 심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기사건의 초기 보고 그리고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통렬히 인식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곳이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런데 위기상황 관리자를 지금 행정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사건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분석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 예를 들어서 비서관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우리 정부가 국립지리원이 독도를 리앙쿠르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서도 20년간이나 방치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도서관 한국학 책임자인 김하나 씨와 조지워싱턴대학 김영기 교수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검색 주제어에서 독도를 지켜 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본 의원은 독도지킴이의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많은 국민들이 김하나 씨의 이와 같은 기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하나 씨에 대한 적절한 포상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화폐, 주화 등에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넣어서 상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새로 발행될 예정인 10만 원권 지폐에 독도를 도안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연구사 한 명이 과거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의 역할을 전담한다고 하는데 인력 면이나 업무부담 면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연구사 한 사람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북아 역사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기보다는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있고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전문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340여억 원을 투입해서 독도를 유인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까지의 진척 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난 2006년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작년까지만 49억 원을 투입해서 독도 접안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84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수립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종합해양과학기지 등 최근 신규로 제안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유철 의원** 그 계획에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계획도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 문제로 여러 가지 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독도의 민족적·역사적 의의를 알리기 위한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또 파리의 에펠탑처럼 한국의 독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적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나 독도지킴이 안용복 동상을 세워서 이를 독도 관광과 연계시킴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으로 활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내년부터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사부나 안용복의 동상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인 동방훈련을 해마다 축소해 왔고 올해 5월에 예정됐던 상반기 훈련도 유류 절약 등을 이유로 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동해에 해상자위대 전력을 개편하고 이지스함을 투입하는 등 해상훈련을 강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훈련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줄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본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더 강력하고 확고한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군의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리 군은 03년부터 유사훈련을 통폐합한다는 차원에서 훈련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 규모를 확대해서 훈련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훈련 시기는 애초부터 5월이 아니라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도방어훈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여 확고한 독도 수호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또한 경찰과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군사적 또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해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 자체가 이러한 계획과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우리 군은 위협이 증가되면 즉시 군을 투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도는 평시 경찰 관할 도서로서 경찰이 주둔하여 경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군을 주둔시킬 경우에는 한일 간에 쉽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조그마한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마도와 관련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나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와 역사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는 1737년 프랑스 지도제작자인 당빌이 제작한 지도입니다. 청나라의 강희제의 명을 받아서 예수회 선교사께서 제작한 지도이지요. ‘조선왕국전도’에 보면 틀림없이 독도는 우리 땅으로 명기되어 있고요. 울릉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대마도가 우리 영토에 명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국의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많은 사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후손에게 교육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방금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이 보여 주신 고지도에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마도에 관한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해 푸른 바다에 떠있는 우리의 독도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민족의 섬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원유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김부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몇 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에 진행된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보고 착잡함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 싸움을 벌이면서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와 논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왜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한 지 석 달 만에 20%대로 떨어졌는데 이 모든 책임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인 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한 분들이 두 달 동안 온 국민이 촛불을 켜고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시원한 해법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한…… 왜 그렇게 해왔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 가고 지금 서민들은 물가 폭등 때문에 고통뿐 아니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측근들을 꼭 주요 방송사 사장에 앉히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이 자리는 기 싸움 하고 논쟁해서 이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이해를 구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동참과 협력을 호소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도 만약 이런 오만한 식으로 답변을 계속한다면 우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본 의원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태도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야당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여당의원석에서 몇 차례 야유가 나왔습니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요,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분을 내팽개친 채 정부 입장만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행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국회에 오시기 전에 다 각 분야의 지도자이거나 전문가이셨고 존

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분야에서는 소수파의 의견을 그렇게 야유나 보내면서 물어버렸습니까? 그런 행태가 민주주의나 다수의회의 원리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일부 의원들께서 본의 아니게 관행을 잘 몰라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면서 국민 대표자 회의인 국회의 존엄과 위상에 걸맞은 그런 성숙한 자세와 의정 활동을 호소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에는 상황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적 원인은 뭐라고 하더라도 북한 초병의 과잉 대응입니다. 아무리 초병의 근무수칙이 어떻고, 어두워서 식별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해도 무조건 북한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다, 우발적이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백한 것은 민간인, 그것도 관광객을 상대로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관광객인 줄 몰랐다? 금강산에서 관광객 말고 누가 있습니까?

또 실제 관광객이 아니었다면 북한 주민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자기 나라 사람은 그렇게 막 사살해도 되는 겁니까?

고 박왕자 씨 역시 우리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금강산 관광객이 그러하듯이 북한 역시 우리와 한겨레이고 금강산은 늘 그리운 곳이며 같은 민족을 돕는 마음으로 아마 관광길에 올랐을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해교전과 다릅니다. 그때는 군대와 군대가 충돌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군인이 민간인을 쏜 것입니다.

북한은 입만 열면 민족을 이야기하고 통일을 소리 높여 외쳐왔지 않습니까? 민족의 통일에 대한 소원을 가슴에 담고 금강산 관광길에 오른 민간인을 쏘아놓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 당국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상은 항상 그 밑에 또 다른 본질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적 원인은 북한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적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현장 조사나 재발 방지 등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 ‘개성관광 중단을 검토한다’ 하는 강경한 목소리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정부가 내놓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그런 대북 정책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긴급하게 돌아가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도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 개방 3000’은 북한 정권에게는 대단히 위험 신호로 읽혀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진정으로 돕겠다면 상대방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돕는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거는 이재민 구호나 극빈자 구제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는 이 ‘비핵 개방 3000’은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이나 ‘개방’은 ‘3000’의 전제 조건인데 북한은 핵과 개방을 사실상 자신들의 거의 주권적인 지위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길을 닦으려면 정부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가치나 철학적으로 강한 반감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3000’이라는 건 결국 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풀 일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오로지 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넘자는 게 통일이지 돈 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건 상행위나 거래에 불과한 겁니다. 남북 대결구도를 넘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려가 부족한 구호가 아니냐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책에는 정책 구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로 만드는 방법만 5대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비핵과 개방은 누군가 해 주리라, 적어도 미국이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앞으로의 해결책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동안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내의 준비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정부는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자회담 때 수석대표 회담 시에 북핵 불능화 작업을 10월까지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불능화 작업이 예정이 되는 대로 동 구상의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이 구상이 말이지요, 대선 시기의 공약 혹은 국내용이라면 또 몰라도 상대가 있는 외교 내지는 대북 정책으로는 지나치게 공세적이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산 사태가 나더라도 별로 해결책을 못 마련하는 것 같은데 정책으로서는 실질적 의미도 없고 현안 해결도 못 하는, 그러면서 남북 관계 경색만 가져오는 이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폐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쎄,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라는 사실 동 구상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이 아니라 남북, 특히 경제 관계의 진전을 목표로 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현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합시다라는 남북 대화가 재개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근간이 돼서 북한도 이해하는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개성관광 사업 역시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했다시피 이 구상은 ‘수출기업 육성,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남한 기업의 투자와 북한 진출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훌륭한 정책 모델인 셈인데 지금 개성관광을 중단하게 되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까지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개성관광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문

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관광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다만 관광객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보가 돼야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을 비롯해서 개성관광 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이른바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대북 라인이 모두 붕괴되어서 효과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시기에 대북 라인이 잘 가동되었던 과거 김영삼 정권까지의 그런 남북관계의 돌발변수와 최근 지난 10년간의 돌발변수,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남북관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김영삼 대통령 때,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처음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진전되는 기미가 있었습니까라는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서거하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좋게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진정한 의미의 남북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가 그 사이에 많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해서 북한의 경제는 아시다시피 한동안 침체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핵 개방 3000’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간입니다.

○김부겸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정부 기간 내에 유엔 총회 의장을 지내시는 등 국제사회에서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많은 역량을 보이셨습니다.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 이런 실행 계획이 없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

기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남북관계를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이 안 되어서 온 국민이 불안하고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면 쇠고기 문제가 터지고 일본 갔다 오면 독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 가는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방식을 확 바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고 대통령은 대표이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이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번영을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부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진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침탈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문제로 촛불 홍역을 치르고 난 지 얼마 되지지도 않아 국민의 생명과 영토 주권이 유린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실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외교안보상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올해의 송례문 화재 사건 그

리고 AI 확산에서 보듯이 우리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매번 그 허술함을 지적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가 부재의 총체적 위기는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귀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 북한의 새 정부 흔들기와 일본 우익의 치밀하게 계획된 영토 침탈을 예견하고 준비했어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는 금강산 사건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며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하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수행비서관으로부터 최초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 직후에 통일부장관에게 유선을 통해서 보다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부는 차관 주재 관계 기관 합동대책회의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 주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그러니까 오후 3시경 보고를 받으셨구만요?

○국무총리 한승수 2시 한 50분경에 받았습니다.

○공성진 의원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 발생 시간 4시간 30분 후인 오전 9시 20분에 북측의 명승지 총국으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현대아산 측 관계자가 2시간이 경과한 11시 30분에야 팩스로 통일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통일부는 11시 45분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위기정보상황팀에 보고를 올렸고 약 1시간 50분이 지난 13시 35분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저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 당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 이튿날 오전 1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 밤 9시 30분에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부랴부랴 개최되었는데 최소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도 당일 열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을 놓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위

기관리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공성진 의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 대응이, 혹은 능력 보고가 실무자들의 자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직 축소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좀더 원인 차원에서 노무현·김대중 정부 10년의 소위 국가기관 무력화로 인한 그 연장의 귀결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어느 한 분야를 지목해서 얘기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그 셋 모두가 다 이번의 상황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성진 의원 지금 정부의 진상조사가 끝나야 알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현시점에서 이 사건이 북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 정부 흔들기와 또 앞으로 대남 협상전략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혹은 북한의 대남 유화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이것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는지, 의도적인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것이 우발적이든 우발적이지 않든 이와 같이 비무장된 민간인 관광객이 총격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고 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 가는 관광객들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관광객이 북한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공성진 의원 이것이 우발적이냐 아니면 의도된 것이냐의 판별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우발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고도의 술책이라면 향후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액션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상조사와 함께 총리께서는 이것의 성격을 규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정확한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은 철저히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떤 경로로,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당일 12시 10분경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관광객 1명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는 첩보는 저희 참모로부터 구두로 받았습니다.

○공성진 의원 그 이전에 질병사라는 합참의 보고는 접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이전에 질병사라는 보고는 접하지 않았습니다.

○공성진 의원 이런 혼선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질병사라는 혼선은 최초에 동해 CIQ에서 금강산 내륙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긴급히 비무장지대 통문을 개방하여 달라는 요구가 CIQ로부터 군 상황실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망 원인이 무엇이나, 그러니까 질병인지 사고인지 모르겠다 하는 최초 짧은 순간의 그런 착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성진 의원 이것이 국방부장관을 통과하지 않고 막바로 청와대로 보고가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나중에 그 상황을 조사해보니까 그것은 상황 보고의 성격이 아니고 합참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참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공성진 의원 좋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전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장관께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이 동향은 저희가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성진 의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정권 바뀌고 난 이후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 4월부터 전방 군인에게 남한은 적이라는 사상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MZ, 판문점의 많은 북한 군인들이 한국관광객에게 위협적인 언사와 태도를 보여 왔지요. 그리고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두 달 전에 금강산 관광지역의 초병들에게 경계 강화 지시가

북한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와는 달리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4월 1일 이후 북한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난을 시작하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 행위들이 포착되었으며, 그러나 북한이 관광지역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강화하라 하는 것 같은 첩보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었으나 유사한 첩보들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군은 금강산 관광지역에서의 어떤 사건에 관한 징후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군사적 도발에 중점을 두고 감시를 강화해 왔고, 그것에 대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향후 있을 북한의 도발 어떻게 상정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있을 것 같다면?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NLL에서의, 해상에서의 도발이라든지 또는 지상에서의 침투 도발, 공중 도발 등등 군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하여 그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또 훈련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이번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위기 탐지 차원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 과거와 다른 북한군의 동향이 파악되었다면 이것을 관계 기관과 즉각 정보 공유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하루 수천 명이 체류하고 있는 금강산 지역에 우리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현대아산만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존재한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사실 그동안 2004년에 우리 남북한 당국 간의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금강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계속 합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당국자가 없다는 보니까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성진 의원** 그렇지요? 2004년 1월 29일 체결된 체류에 관한 그 협정에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우리 인수위에서도 강력히 공동위원회 설립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거부로 되지 않았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공성진 의원** 이것이 이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공성진 의원** 자, 비록 적지 관광이지만 현대아산이라는 사기업만이 있고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것은 이런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내연하고 있던 비극,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성진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재 정부 내에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청와대 안에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있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공성진 의원** 어디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청와대 안에, NSC 안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상황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그 위기정보상황팀은 법적 존재가 아니고 임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래서 그 위기관리시스템을 보강을 하고 철저하게, 이번의 원인의, 여러 가지 상황의 전개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있습니까?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안보수석에게 모든 보고가 직보가 되고 외교안보수석만이 유일하

게 언제 어디서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공성진 의원 어떤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그 위기관리체제의 미비한 점을 정리한 뒤에 한국에 맞는 이와 같은 위기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성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을 기획조정과 상황정보분석 및 위기대응의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토록 해서 미국처럼 모든 안보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진 의원 외교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소위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입니다. 여기에는 200여 개의 언어로 하루에도 수천만 명의 네티즌들이 들락거리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백과사전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공성진 의원 여기에 보게 되면 한국어나 중국어, 폴란드 버전을 제외하면 영어를 비롯해서 모든 언어로 독도를 뭐라고 해 놔습니까? 리앙쿠르 바위로 해 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장관께서는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즉 섬이 바위로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요, 국제법적으로?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우리 독도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섬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아니, 섬이 바위가 되면 국제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바위가 되면 그 자체로서 어떤 기선을, 영해를 갖든가 또는 200해리를 갖든가 그런 지위에 있어서는 섬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그렇지요, 200해리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단지 12해리 정도만 하게 되는 것이지

요? 그러니까 지위가 많이 격하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께서 저 사이트를 한번 보시지요. 저건 무슨 사이트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얼른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가까이……

○공성진 의원 잘 모르시겠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공성진 의원 이건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사이트입니다.

우리 한국 것과, 한국 외통부의 독도 사이트와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천양지차가 날 정도로 일본 것이 훨씬 더 우수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사이트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지금 저런 거를 전부 다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부 산하에?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우리 외교부에는 우리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자료를 보강하고 또 법적인 논리를 보강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해양전략과라고 해서요, 조약국 내에 그게 있습니다. 있고, 또……

○공성진 의원 해양전략과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다음에 우리 부서는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독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동북아역사재단은 외무부 산하가 아니라 교육부 산하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교육부 산하로 돼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이와 같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토 주권을 침탈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1개 과에서, 전담 부서가 저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과연 이 침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우리 전담 부서가 외교부 내에 있지만 우리 국내외 여러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각종 사료와 각종 법적인 논리는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총리, 나오십시오.

지금 차관의 발언을 보게 되면 조용한 외교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제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독도를 수호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꼭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공성진 의원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이면에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익 정치인들이 내각에 많이 포진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경화가 정지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데 저희들로서는 국력을 신장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정부나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당적으로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성진 의원 이 독도를 위기국면 차원에서 위기관리시스템에서 다뤄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이것은 위기관리시스템에서 다뤄야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저희 영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의 주민도 살고 있고 해서 일본에서는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에 조금도 양보 없이 우리의 국토 일부로서 계속 지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본 우익이 어떠한 정책을 주장하든 간에 그것은 일본의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공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관광과 비관광 사이 30cm 높이의 모래 뚝방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리라고 고 박왕자 여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적지 관광의 사각지대에는 국방부도, 국정원도, 통일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대아산이라는 사기업과 이를 용인하고 후원해 준 잃어버린 10년의 대북 무장해제 정책만이 있었습니다.

상생의 미래를 위한 한일 신시대는 어항 속의 고래인 일본이 어항을 깨고 큰 바다로 뛰쳐나올 때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몸집만 컸지 정신적으로 미숙아인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독도가 교두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인의 용서와 협조를 통해서만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공성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포함을 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 결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정회한 뒤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개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산회할 때 모습을 또 아름답게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정시 개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면.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출신 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008년은 민족해방 63주년,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업화·선진화를 압축적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우리 국민이 그 열매를 축하하고 선진국 진입을 도모해야 할 이 시점에 참 나라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 4개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선진국 진입은커녕 나라가 거덜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하도 하도 안 돼 가지고 비판할 의욕조차 상실해 있습니다.

이 점은 보수 원조를 자처하는 김용갑 전 의원께서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정부는 갈팡질팡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난국입니다. 위기입니다.

여야 관계없이, 특히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술수라든지 사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좀 진정성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좋은 정책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상실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 신뢰 획득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잘 돼야 야당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클 수가 있습니다.

외통부장관님!

외통부 차관이 나오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실용외교가 뭐예요, 실용외교?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실용외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우리 국가 이익에 충실하는 외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의원 대통령 말씀도 비슷합니다.

매국노가 아닌 이상 실용외교 전개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익 위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교 펼 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명분이라든지 이념이라는 것은 아예 명분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잘 보필해야 됩니다.

영토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는 실용외교에 포함되니까, 안 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일본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또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철저히 수호하는 그런 외교는 실용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요.

됐습니다. 저기 이렇게 합시다. 실용외교라고 허황된 얘기, 허풍 외교 떨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1과제로 하는 외교, 아마 그런 뜻이지요, 실용외교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답변 못 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제가 아까 실용외교에 대해서 이미 제가 가진 개념은 말씀드렸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러니까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외교라고 하자고요. 그게 이해가 쉽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수사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제가 실용외교에 대해서는 아까 드린……

○강창일 의원 유명환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헛갈리는…… 한국말 헛갈리게 만들지 말고 용어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자꾸 일본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냐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한일국교 정상화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경제이익만 추구해 왔어요. 역사적 사실도, 민족적 자존심도 팔아먹는 꼴이 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까, 모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저는……

○강창일 의원 1965년도 한일협정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저는 그 협정이……

○강창일 의원 김종필 씨가……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우리 이웃나라로서 미래 관계를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 협정이 경제적 이익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협정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강창일 의원 공부 좀 하세요! 한일협정문 전문 읽어 보시라고! 식민지배가 불법인 것이 한마디도 없고 배상·보상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이에요. 최소한 외통부에 계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경제협력자금 5억 불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전문가한테서 지금 참……

김종필 씨가 옛날에, 1962년도 10월에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독도 폭파하자고 한 얘기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언론보도는 봤습니다만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그러면 1962년도 10월 23일 신문을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것이! 김종필 씨가 매국노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마 섬과 바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제적 실리 추구 이것을…… 경제협력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때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독도 문제에 별로 깊은 관심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가, 독도 문제가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지금부터라도 가서 연구하세요.

그다음에 말이지요.

권철현 대사라는 분, 대사로 간 다음에 독도 문제하고 역사왜곡 문제를 낡은 문제라고 했어요, 낡은 문제. 그것이 낡은 문제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일본에 가서 대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외통부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발언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우익정치가들……

다음에 말이지요, 요미우리 말이지요. 이번 독도 해설서 문제에 독도 문제, 5월 18일 날 요미우리신문 보고 정부가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외통부, 3월에 발간된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충분히 명기할 개연성이 있었는데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외통부에서, 일본대사관에서…… 왜 안 했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요미우리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제

가 일본에 가서 외교차관과 만나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또……

○강창일 의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때가 6월 초입니다.

○강창일 의원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2개월 사이 시간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 이후에……

○강창일 의원 4월에는 대통령이 갔었잖아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 이후에 장관급 레벨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강창일 의원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제 얘기를 정확히 아세요.

저는 3월의 학습지도요령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5월 18일에 요미우리신문을 보고 비로소 대응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4월에 대통령이 갔었거든요.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2개월 사이에 준비하고 일본 사람들을 막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외통부에서, 주일대사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것은 3월에 그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기간에 우리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본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늘 단호하고 확고한 정책을 취했고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강창일 의원 과거사, 과거사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일본 정부에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과거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계기에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 측에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강창일 의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먼저 분노해 가지고 마지못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그런 식의 전철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과거사 일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해 주십시오.

○**강창일 의원**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과거사 문제입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것은 과거사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엄중한 영토에 관한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다음에 일본을 책임질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미래의 문제이고, 독도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과거사 문제 얘기하면서 얼렁뚱땅해서 지나갑니까? 자꾸 착각 하도록.

들어가세요.

총리님!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이는 것은, 잘 되던 부분이 꼬이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져서 그래요. 1965년도 한일협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쳐 버렸어요.

저기 말이지요. 답변 안 해도 좋고요. 한일협정 재개정 문제 검토하세요. 그리고 신한일어업협정 개정 문제도 검토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한일협정 관계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그것 때문에, 반대하시다가 감옥에도 가시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그런 협정입니다. 그러나 체결된 후에 거의 40년이 가는 동안에 양국 관계의 기본이 또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부수적 조치들도 다 이미 완료가 됐고 해서 어느 면에서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일 관계의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외교적 신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이걸 재체결한다든가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한일협정을 파기하거나 재개정하는 것보다 탄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창일 의원** 총리님이 경제학자가 돼서 잘 모

르시는 것 같으면 내가 쓴 글을 보내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조약이든 협정이든 잘못되면 고치는 겁니다. 일본이 불평등 조약 파기하기 위해서 40년 걸렸어요. 어업협정도 일본이 파기해서 또 신어업협정 맺었거든요. 잘못된 것을 알면 늦었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 보내 드리고 글 보내 드릴 테니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동북아역사대책팀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어 봤더니 그것도 진실은,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은 연구하는 재단이고요, 정책 제안을 하는 재단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각각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정부가 가져야 됩니다. 교육부에 두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총리실에 갖다 놓으세요.

아까 얘기하는 것 들어 봤더니 변명만 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해 주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정부조직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실 인원이 좀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재단에서 이 관계에 관한…… 또 다른 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는데, 이 문제를 총리실에서 한번 총괄하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요, 저희 언론 자유 60년 싸워서 얻어낸 겁니다. 지금 책임 남한테 전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헌법 파괴적인 언론 탄압, 당장 좀 중지하세요. 현 정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과 싸워서 이겨본 정부가 없습니다. 권력 없습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의원님의 그와 같은 의견을 잘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 집권여당,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잘 해 주세요.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강창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마이크에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려고 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전달이 좀더 잘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의원입니다.

금강산에서 새벽 산책을 하던 관광객이 단순히 관광지와 접한 군사경계지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 살해를 당한 지가 이미 열 하루째입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설명한 사건 진상은 오히려 의문점만 생기고 의혹만 증폭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비무장 관광객을 총격으로 사망시키고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남측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진상조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해서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대북 정보가 이렇게 없고 대화 창구가 이렇게 없느냐, 관광객 신변 안전대책이 이렇게 허술했었느냐, 관광객 신변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개성 관광은 계속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붕괴된 대북 정보체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건 경위나 현대아산에서 북측 설명을 듣고 우리 국민들께 전해 준 사실은 우리를 의심과 의혹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에서 전해 준 정보라든지 북측 당국이 발표한 이외에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보고받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아산 측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총리에게는 그렇습니다.

○**黃震夏 議員** 금강산에는 현재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없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화 통로, 정보 통로가 막혀 있고 정보를 현대아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동조사단을 제의를 했고 북한이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당국에서도 북한의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黃震夏 議員** 국정원, 국방부, 연합사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정보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상 모든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청와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에게 보고되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각종 정보기관이나 부대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어느 정도 청와대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대북 정보기구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거나 소멸되었거나 가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구나 조직마저도 모두 마비가 될 정도로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몸을 담았던 그런 인사들은 승진, 보직 이런 측면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가기 싫어하는 부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총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으로 대북정보 수집 기능이, 전통적인 방법이 조금 취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원 당국에서도, 또 다른 정보당국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틀

림없이 이와 같은 정보체계가 다시 재구축이 되고 올바로 좋은 정보가 속히 속히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黃震夏 議員** 이러한 정보기관들의 기능의 회복 이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책이 그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보 부재 현상 속에서 북한의 의도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제한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급선무의, 그런 최우선의 과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올바른 정보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에 더해서 그동안에 약간 소원했던 한미 관계가 강화되면서 한미 간의 정보 교환도 과거 못지않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정보기관들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사건 초기의 대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통일부에 보고한 데까지는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씩 걸린 늑장 보고, 보고 지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총리실에 아산 문제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 관계에 대한 평가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하게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두 시간씩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올 줄 압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통일부가 현대아산으로부터 보고받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데까지도 또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대응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NSC의 해체가 이런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NSC를 비롯한 위기관리 체

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위기관리 체제가 정착이 되면 지난번 금강산에서의 피격사건 같은 것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보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마는 총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보기관의 재할, 기능의 회복 그리고 우리 위기관리 체제의 대폭적인 개선·보강 이런 쪽에다 관심을 두시고 최우선 과업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번 금강산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찰권, 군권이 미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아산의 안전 관리 소홀과 북한 측의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일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고 하고 우발적 사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동의합니다.

○**黃震夏 議員** 현대아산 측이 이런 안전관리 소홀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아산에 대해 통일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통일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현대아산에 대한 충분한 관리 책임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黃震夏 議員** 먼저 얼마나 안전관리가 소홀했느냐 살펴보면 경계선상에 있었던 펜스가 약 30m 정도 해변 쪽에서는 짧습니다. 그리고 모래언덕이 되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黃震夏 議員** 그리고 모래 언덕은 아무나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경고판이라고는 그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는 경고판을 볼 수

가 없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黃震夏 議員**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해수욕장이 7월 10일 날 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현대아산의 안전불감증도를 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살 사실을 알고도 관광버스를 다시 출발시켰다든지 그리고 시키거나 한 안전교육—어떤 사람은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 그러고—그러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소홀했던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관광객이 경계선이 어디고 여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현대아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물으실 예정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총리실 주재로 해 가지고 이번에 금강산·개성 관광 점검평가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계속……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점검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남북 경색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대화가 되지 않는 것도 남북 경색 때문에 그렇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 중에서 또는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 경색이 온 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은 사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저희들을 수도 없이 욕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남북대화가 이렇게 된 데는 저희보다는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이러한 신변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개성 관광이 계속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는 이 사건이 난 다음부터 이 문제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침을 정해서 이 문제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 관광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러나 신변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개성 관광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개성 관광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우선이다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반드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검평가단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신변 안전 대책, 재발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계 펜스가 있는 곳에 CCTV가 있었는데 CCTV는 작동이 안 되고, 경계 펜스는 허술하고 누구든지 아무나 들락날락하기 쉽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경계병 배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의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직 조사가 명확하지 않아서 당시 확실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제구역을 북한이 불명히 설정을 하였고 철조망과 모래톱을 설치한 이상 그 외부에서 외부인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히 경계상에, 경계 자체로 보면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것은 뭐냐 하면 경계선을 방치한 거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을 방치한 거다, 그리고 CCTV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의 경계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국민의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을 그렇게 관리해도 좋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이 경계 철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만 일단 통제구역이 설정되고 거기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이전에서 통제가 되어야 하고 또 이번과 같은 과잉 대응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것으로 보면 경계선을 넘어서 약 800m 정도를 여인이 걸어갔습니다, 북측으로. 그러면 800m 정도까지 가는 시간이 시속 4km로 갔다고 그러면 약 12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2분 동안 약 800m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동안까지 발견을 못 했었다, 이것은 북측이 경계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게 봅니다.

○黃震夏 議員 그러니까 경계를 잘못했다는 것이 북측의 실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허겁지겁 무슨 ‘거기 서라.’ ‘멈춰라.’ ‘손들어라.’ 이렇게 수하(誰何), 소위 군대 말로 수하라는 것을 한 것인데, 그렇게 당황해서 충격을 가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확실한 첩보가 없어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보면 북한의 경계 책임이고, 경계를 갖다가 소홀히 했고 방치했고 이런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黃震夏 議員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군장병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국군 장병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늘 우리 장병들에게 강조를 해 왔지만 북한과 북한군은 여전히 우리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고, 그들은 합의나 약속사항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문제가 생

기면 적반하장식으로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태도를 가진 그러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장병들의 특별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이번 교훈을 확실하게 장병 교육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복을 피하고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독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중학교의 역사교과서 지도요령이라고 하는 학습서 거기에다가 표기를 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렇습니다.

○黃震夏 議員 그러면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교과서에다가 이런 획책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럴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요령 문제 등 금년 8월부터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5~6월경에 일본 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議員 미리 대책을 세워서서 이런 문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알겠습니다.

○黃震夏 議員 예, 이상 마치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 초당적이고 또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초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난 극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와 사당을 모신 아산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비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정은 방향 감각을 잃고 있고 한반도의 시계는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새롭게 제대로 일해 보라고 뽑아 준 이명박 정부의 5개월여는 지난 참여정부 5년의 실정과 실책을 압축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국민 생명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 난맥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향간에서는 ‘5高·5無·5不 정부’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제정책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실업이고, 정부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무감각하고 무기력·무대책·무책임·무정견 정부라는 말씀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서는 불안·불감·불통하고 불편·불만스러운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중의 최고들로만 구성되었다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그 많다던 측근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쇠고기 문제만 해도 관련 공무원과 국무위원 한 사람이 제대로 챙겼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태풍처럼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서 공통된 지적이 국정 전반에 걸쳐 국정철학·전략·컨트롤 타워·라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리께서 바로 국정 컨트롤 타워의 그 한복판에 서 계시면서 스스로 총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어

떻게 보완·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초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데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괄해서 국정에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을 섬기는 그와 같은 국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위기관리와 관련해서도 앞서 오전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현재 정부 내에는 외교안보 관련 주요 사항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번 금강산에서의 피격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사회학자 올리버 백이 ‘위기사회’라고 했습니다. 위기관리는 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아쉬움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독도 문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독도 문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하되 보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시각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적으로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독도 문제는, 독도는 저희의 영토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영토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탄탄하게 우리의 영토로서 계속 수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 없이 우리가 차근차근 좋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은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력을 길러서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번듯한 이와 같은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와 같은 우경화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초당적인 이와 같은 대책이 국회에서도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조와 의지가 제대로 당론화되고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이 독도 문제가 물론 한일 양 당사자의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때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이나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필요하다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북한과의 남북한 정상급 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의하기보다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 7월 7일인가 그와 같은 의사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광범위하게 남북 간의 화해와 또 길게는 통일 관점에 두면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는 독도 문제 일본에서 자꾸 일으키고 있지만 영유권에 대한,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경쟁을 해왔다고 할까 여러 가지로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과거사 문제라든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논리가 국제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동해를 다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해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문제, 해양 오염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의 터전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으로 신동해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독도 문제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이나 중구난방(衆口難防)식의 이런 대책이 아니라 독도에 관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성격의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독도의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 문제만 하더라도 국제수로기구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 동해 기본 구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하루 속히 좋은 이와 같은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립니다.

근간에 독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독도법이나 신동해정책의 선포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서 태극기도 게양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포할 의향이 있으신지 총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면서 이 독도 명칭 사용이 불과 100여년에 불과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독도에 대해서 우리 문헌상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신라시대에 ‘무릉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단기적으로는 혼선을 줄 수 있지만 이 독도 명칭 자체를 ‘무릉도’라고 하는 우리 문헌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지명으로 바꾸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직접 그분의 전문서적을 참고로 했고 또 이 서적에 독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좀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라,

고려, 조선 또 1018년 우산국 멸망까지 독도를 ‘무릉도’로 표기한, 고유명칭이니까 그걸 바꾸자 하는 말씀이신데 독도에 대해서는 ‘우산도’라고도 그러고 ‘삼봉도’라고도 그러고 ‘석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독도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단기간의 혼란은 있겠습니까마는 일본이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100여 년과 비교해 볼 때는……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이명수 의원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해외 홍보의 미흡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명수 의원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또 국제사법재판소를 겨냥한 국제법적인 대응과 검토 노력도 사실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개선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독도에 관해서 이것이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orea Foundation) 같은 데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것을 홍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일본 학자가 한국 측보다 더 많은 근거와 주장과 조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독도뿐만 아니라 독도도나 간도 같은 이런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우리 정부 내 어딘가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마네현 대학의 나이토 교수인가 하는 분이 이것이 전통적으로 한국 령이라 하는 얘기를 용감하게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본학자들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고유의 영토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본 학자들의 주장도 잘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앞으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도가 완전히 한국 영토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조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가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새 정부 들어서서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북정책이 전환되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점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과거 10년간의 대북정책과 달라야 된다’ 이런 강박 관념 때문에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대북정책의 전환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은 항상 대화를 오래 끌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때는 9개월이 걸렸고, 국민의 정부 때는 12개월이 걸렸고, 참여정부 때는 7개월이 걸려서 남북대화가 재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가능한 가까운 장래에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서 남북 당국자 간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 문희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명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특히 ‘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정원과 군 정보

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이번에 작동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한승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조직을 강화해서 추호의 착오가 없이 올바른 정보가 빠른 시간 안에 수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북한 관광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사건 등을 비롯해서 해외 관광객과 교민의 안전 대책,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강화된 안전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해외 관광객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지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이라든가 또 금지된 지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관광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강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대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와 남북문제, 사실 이 문제는 과거 국회와 정부에서 대부분 다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국민께 답변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이슈가 생기면 온통 난리를 치다가 곧 잊어버리고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그런 대책,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조치와 검토 사항 반드시 이행,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 대신 희망의 빛을 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부와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독도 문제와 남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논의가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정옥임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도 문제가 정쟁화 되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터무니없는 독도 괴담이 유포되는가 하면 일본의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요미우리의 보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 지도자에 의해서 거론되면서 이명박 정부를 질책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비무장한 금강산 관광객을 등 뒤에서 총질한 북한도 그 진상조사 요구는 무시하다가 새삼스럽게 민족을 운운하며 독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를 힐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계속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가사회 에너지를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와 정치적 책임 전가에 써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일본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불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 놓겠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외교 전쟁 불사하겠다. 패권주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공언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의 한국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중국에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일본이 인정하리라 보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역대 정권의 강경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독도 영토 주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본 정치가 우경화되면 우경화될수록 그와 같은 경향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에서 일본은 오히려 우리의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을 유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확실히 단호하게 다루되 다만 일관성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초당적인 지지가 절대로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鄭玉任 議員 오늘 총리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력을 늘려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독도 대책 보면 이미 과거에도 거론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과연 일본에게 이 독도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일본에게 불이익이고 우리에게 이익이다라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정치·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국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본이 그동안에 한국을 강점했던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 한테도 불구하고 1905년에 시마네현이 만든 이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자기네 영토라고 한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인 힘은 저희보다 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도덕적 힘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많이 호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영토로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또 수호할 것입니다.

○鄭玉任 議員 쉽게 말씀을 하자면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집으로 치면 등기가 다 된 상태인데 일본은 50여 년 동안 우리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도가 현재 분쟁 지

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국무총리 한승수 아닙니다.

○鄭玉任 議員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군사적 긴장이 없는 한 일본이 바로 국제 긴장을 유도하는 이런 획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국제 분쟁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정책에 말려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를 정말로 주민들이 좀 더 가서 살게 한다든가 시설을,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 확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실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鄭玉任 議員 다음은 외교통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공성진 의원께서 자료화면을 보여 드렸듯이 일본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 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독도는 우리 영토고 우리 수중에 있습니다. 독도가 동해안에서 217km가량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울릉도가 우리 영토이듯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행정구역 속에 편입돼 있고, 우리 주민이 살고 있고, 우리 경찰 소속 독도경비대원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영토를 두고 일본이나 어느 나라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독도가 우리 수중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나 유엔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어떠한 국제기관도 독도를 어느 누구에게 넘겨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일본이 우리 수중에서부터 가져가려면 현실적으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동의하겠습니까?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수중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냉철하고 차분히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영토 분쟁을 판정하는 각종 국제법적인 논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필요도 없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국제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그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국제법적 관점에서 학자들은 ‘실효적 지배’…… 요새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평화적 계속적인 것이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후의 점유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쟁 발생일은 결정적 기일 즉 critical date로서 설정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법적 관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지도는 1905년에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독도가 대한제국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자료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전에 영국이 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대한 초안을 만들면서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게 1952년 지도인데, 여기에도 분명히 독도가 우리 땅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비밀전문을 보낸 것인데, 이것이 1952년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 섬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재고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과거에 대한제국의 땅이었다, 이미 고종황제에 의해서 1900년에 칙령으로 발표된바가 있습니다.

아마 차관께서는 제가 왜 여기서 1905년과 1952년을 강조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결정적 기일, 다시 말씀드리면 분쟁이 발생되기 직전까지의 기일을 1905년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1952년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본이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각종 근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논박하고 부정하는 각종 이론과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연구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영토 분쟁을 판정하는 각종 국제법적인 논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효적 지배의 개념이라든가 결정적 기일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라든가, 그 밖의 여러 가지 법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도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또 일각에서는 지금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별론으로 해양법 문제로 우리가 국제재판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적으로 우리가 해양에 관한 개발이라든지, 방금 전에 신독도법이라든지 독도 영해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국내에 만들게 될 경우에 이것이 국제해양규칙과 저촉되면 일본에게 오히려 발미를 주어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에서의 의무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대처해 가면서 해양법 관련 규정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1997년에 독도 탈환을 일본 외교 10대 지침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1998년에 일본의 자위대가 독도를 가상목표로 설정해서 상륙 훈련 실시한 바가 있다.” 이것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1998년에 상륙훈련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판단 결과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군사정보 판단 사항에는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鄭玉任 議員** 지금 독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가상적인 군사적 긴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2020에 유사시에 독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공군력을 신속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지금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국방개혁 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북한의 직접적 위협뿐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한 미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국익 보호 차원에서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상식적으로 볼 때 일본에 이지스함이 6척이나 됩니다. 우리, 한 척 있습니다. 국방력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양적인 우위나 양적인 균형을 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 영토 문제를 거론할 때 일본의 센카쿠섬 방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중국과 이 센카쿠섬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을 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상방위 정책을 일본은 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하여 경계병력을 상주시키지는 않

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보안청 산하의 순시선이나 또는 해상·항공 자위대가 주기적으로 순시활동을 하고 초계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일본이 센카쿠섬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이것이 국제 여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맞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상입니다.

다시 외통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몇몇 의원이 잠깐씩 지적을 했는데,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15조를 보면 물론 이 어업협정과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다,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중간수역이라는 것을 만듦으로써, 또 일본은 여기를 중간수역이라고 하지 않고 ‘잠정수역’ 내지는 ‘공동관리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독도의 영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재검토의 의향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협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어업협정으로서 어떤 EEZ 경계선을 확정한다든가 독도와 같은 우리 영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수정이 될 때는 또는 폐기될 때는 우리 어민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어업협정이 폐기됐을 때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100% 훼손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사실 이명박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 초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제시했었습니다. 냉철히 판단할 때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는 한국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선의를 과거의 탓으로 덮어씌워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후안무치가 성토돼야 됩니다.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국제평화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겠으며 아시아·태평양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격노하고 흥분해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계속될 겁니다. 일본이 뭐라고 지껄이든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국제법적인 요건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의 강점인 인터넷을 활용해서 일본의 어거지, 그리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홍보해야 됩니다.

소수 네티즌이 살포하는 근거 없는 독도 괴담이 궁극적으로는 한일외교전에서 우리의 입지를 오히려 악화시켜서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저의를 이명박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는 영토 주권인 만큼 단호하되 일본 우파에게 구실을 주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독도에 대해서 여야 없이 한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됩니다. 독도 문제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70대의 한 어르신께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발 대통령 좀 외국 못 나가게 막아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한 번 나가실 때마다 나라가 절단 난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준비 없는 외교, 저자세 외교, 장사꾼 외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고 과도한 성과주의와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외교와 국내 정치의 연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부는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운동장에 뛰어나가 어느 것이 우리 골대인지 분간도 못하고 자살골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외교라고 주장하지만 외교의 정책과 방향이 없는 실종외교인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도 실을 것이라는 예상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총리께서는 아까 정옥임 의원께서는 독도 괴담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위 이명박 독도 포기설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서 ‘그런 괴담도 돌아가는가 보다’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일본 국토지리원이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시킨 지도를 제작한 점, 또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 권철현 주일대사의 발언, 주일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와 동해가 사라진 점 등을 종합해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한마디로 정의한 용어입니다.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일왕에게 머리 숙인 후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청와대 홈페이지는 아직도 천황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외국의 국가수반은 해당 국가의 호칭대로 부르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8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일했을 때도 천황이라고 불렀고, 2003년 6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일했을 때도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외교 관례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삭제했었지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나 이것은 해당 국가의 호칭은 해당 국가에서 부르는 대로 놔두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일부는 삭제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마는 하야튼 호칭과 영토 수호와는 조금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냉정할 때는 또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국민들은 정부가 일본에게 너무 일찌감치 패를 보인 결과이며 예견된 인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저희하고 거의 무관하고 오히려 일본 안에서의 우경화가 이것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일본 내각에 지금 보수·우경내각 요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우경화를 막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추세는 도저히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주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네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독도에 시설을 확충을 하고요, 또 과학단지 같은 것도 좀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또 독도연구소도 만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가능한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정말 수호하는구나 믿도록 하고,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수호하려고 하는 결의를 단단히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권철현 대사가 말한 “독도 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 두자” 이런 발언 때문에 정부 대책 수립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발언한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독도와 관련해서는 적절치 못했던 발언이었지만 전반

적으로 한일 관계는 과거의 역사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과거를 캐다 보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아마 주머니 속에 넣어두자 하는 뜻으로 한 것이 그렇게 확대 재생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의원 확대 재생산보다는 누울 자리 봐서 발 뻗는다라는 그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제가 보기에 타이밍이 아주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청와대가 14일 당일에 독도 관련 발표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아시다시피 마치무라 관방장관하고 문부상이 11일까지인가 무슨 견해가 아직 종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로서는 14일 정오인가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확보한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7월 9일 G8 정상회의 시기에 한일 간에 네 차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차관전략대화라든지 외교장관 회동도 두 번이나 있었고, G8 정상회담까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네 번에 걸쳐서 차관보급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이 혹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해 가지고 그러지 말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G8 정상회담 7월 9일에도 그랬고 두 차례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그랬고 차관전략대화에서도 그랬다고 하는 외교부 자료가 있습니다.

또 일본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이 지난 8일 유명환 장관에게 독도 명기 강행 방침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확정된 것은 7월 11일인가 12일 이후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7월 14일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렇게 7월 8일 외교장관 회동에

서도 독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 명기 사실을 사전에 알고 G8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 전혀 모르고 참석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전혀 몰랐다가보다는 하여튼 그런 지금 발표한 내용하고는, 2005년 당시에 나카야마인가 문부상도 이와 같은 얘기를 꺼내면서 일본 안에서는 보수세력 가운데에서는 이런 기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걸 결정해서 정부가 내놓을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실 때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대통령이 모르셨다는 것이지요?

교육과학부 자료에 의하면 독도 명기와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6월 5일, 7월 4일, 7월 13일입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최영희 의원 7월 13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G8 직후에 그것도 일요일에 긴급하게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일 일본 발표에 독도 명기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 그러니까 7월 11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무라 관방장관하고 문부상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철저하게 뭔가 이러한 경우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니까 14일 날 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일요일인 13일에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 아닌가……

○국무총리 한승수 그때는 14일에 할는지 15일에 할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최영희 의원 그런데 일요일 날 소집을 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가 회의를 자주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최영희 의원 6월 달에 한 번 했었고 7월 4일 날 하고 그다음에 13일입니다. 이게 자주 소집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TF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TF나 이런 것들을, 정확을 종합해 보면 14일 당일에서

야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발표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6월 이후 한 달만인 G8 직전에 있었고 또 일요일에 열렸지요? 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TF 있었습니다. 그래도 독도 명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수 세력이 강해지면서 일본 안에서 중학교 사회과학과에서 해설지침에 대해 뭔가 나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형식,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비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회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는 공개돼서 안 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감추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독도 명기는 오래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내용의 수준만을 검토하고 수순을 밟았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었기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항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안에서의 이 문제는 사실은 아베 총리가 총리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꾸준히 있어 온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짐작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으나, 그러나 2005년 그때부터 계속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토의들은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런데 중간 중간 그런 항의가 있었고 그런 토의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일본 프렌들리 기조 때문에 사전대응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후대책마저 사실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일본이 원래 2012년에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한술 더 뜬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NHK 보도에 의하고 또 주일 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2012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어떤 경우에는 아마 그 이전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대단히 싫어하시는 얘기 좀 하겠습니까.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최영희 의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통령이 설마 기다려달라는 발언을 하셨을까, 절대 믿기지 않지만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요미우리 기사뿐입니다. 도대체 기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현안 문제 질문한 첫날에 존경하는 김재윤 의원께서 이 말씀을 질문하셔서 가지고 제가 그때 답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래서 사실무근이라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데 7월 15일 조간에, 요미우리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에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공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신 줄 아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의원님께서 제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최영희 의원 오전 질문에서 외교부차관이 “오보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 삭제했다”고 답변했는데 요미우리가 정식으로 오보라고 사과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런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았습시다마는 저희 대리대사가 가서 항의를 했고 사실과 다른 데 대해서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요미우리는 청와대가 부인했다는 기사는 실어 줬지만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만 쓴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기사 삭제한 것도 오보라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기사라서 삭제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언론에 대해서 아주 존경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언론사마다 가끔 오보를 합니다. 특히 요미우리의 경우는 보수의 대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의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기사를 모두 100% 믿어야 될는지 저는 의심이 좀 갑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영희 의원 그렇다면 정부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이나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가 정정보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기사가 이제 삭제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최영희 의원 그냥 용서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그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희 의원 대통령을 매국노로 만들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요미우리 서울지국을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고려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언론의 자유는 우리나라에도 보장이 되어 있고 일본에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혹 이와 같은 큰 충격을 주는 보도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국의 문을 닫는 것은 좀 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단일 프로그램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통령을 매국노로 만들어 국민과 유리시키는 요미우리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너그러우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너그럽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정정 기사를 요청을 했고요. MBC ‘PD수첩’에 관해서는 제가 아마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질문 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의원 진실 규명도 못 하고 시정조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교도통신도 9일 정상환담에서 대통령께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에 대한 대응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교도통신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이라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아니면 교도통신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아니요, 교도통신 그 기사의 내용이 요미우리하고 같았다고 그러면 이미……

○최영희 의원 같은 것이 아니라요.

○국무총리 한승수 일본 외무성의 대변인이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의원 아닙니다. 교도통신은 9일 날 정상환담할 때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통보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알아보십시오.

○국무총리 한승수 예.

○최영희 의원 앞서 질문하신 정옥임 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한 야당대표를 비판했습니다마는 환담 시간은 단 15분간입니다. 통역 시간을 빼면 6, 7분이지요. 토씨까지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싶은 비밀이 없다면 국민에게 불신받지 말고 대통령은 당당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킬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믿어 주세요.

○최영희 의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불신이 있으니까 공개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제대통령으로서의 기대치를 높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업적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고려가 일을 혹시 그르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합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최영희 의원 이것은 주로 일본 기업 전용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래서 정부는 후속조치로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기 조성을 결정하셨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예.

○최영희 의원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장소는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아마 포항 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영희 의원 내부적으로 이미 포항 쪽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 포항 유치는……

(「왜 포항인 거야? 포항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것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 넓은 자리 다 차지하지

고 계시는 것만 봐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가슴 떨립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초보가 얘기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가만히 계시 주십시오. 혹시 초보 아니신 분이 하셨다면, 조선 의원 아니신 분이 하셨다면 등단하신 지 며칠 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배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품소재 전용 공단 포항 유치는 2008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상득 의원이 일본 특사로 파견되면서 가시화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썽요, 거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영희 의원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어딘가 공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좋지 않습니까?

○최영희 의원 네.

원래 포항은 철강특화단지로서 출발했는데 이상득 의원이 일본 특사로 가면서 부품소재 전용 공단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지요.

그 후 대통령은 일본 부품소재 분야의 한국 투자 유치가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포항 부품소재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4월 15일 권철현 일본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부품소재 산업을 일본과 협조하라고 언급했고, 정상회담으로 방일 중이던 4월 21일 일본 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의사항도 발표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잣근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혹시라도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일본 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국무총리 한승수 그렇지……

○최영희 의원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한 이후에 구조적으로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본 소재, 중간재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간재 기업들이 한국

으로 들어오면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줄지만 그것을 다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토 주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만큼 소재산업을 공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루속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최영희 의원** 저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경제 때문에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영희 의원**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높아질 때면 교묘히 독도 침탈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대북관계가 경색국면이 되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2월부터 독도 명기를 계획해 온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금강산 사건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14일에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는 것도 또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남북관계가 직접적으로 독도 영토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독도 문제는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력을 배양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일본이 독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토로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최영희 의원** 2005년부터 2006년 10월 북한 핵 실험까지 한번 그때 당시의 남북관계와 그리고 독도와의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연구를 해 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셨

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취임 후 4개월이 아니라 퇴임 전 4개월 같다는 국민의 말을 잘 귀기울여 이번 두 사건에 제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국민과 싸우는 정부가 아닌 정부가 표방한 대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국내의 화합을 도모하고 일본의 독도 문제에 단합된 힘을 모아 대응하는 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울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부도 북측이 현대아산을 통해 밝힌 고 박왕자 씨의 피살경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젊은 북한군인들 여럿이서 50대 중년 여성을 500m나 추격해서 못 잡았다는 북측 주장이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지 간에 젊은 군인이 중년 여성을 500m나 못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현대아산은 사건 당일 남측으로 통하는 호텔 전화선을 통째로 절단한 것은 물론 북측이 제공하는 말 바꾸기와 억지 꿰어 맞추기식 주장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이 이런 태도로 과연 대북 관광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날 현대아산이 대외로 나가는 선을, 4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만 남기고 38개를 끊은 겁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대아산의 초기 대응이라든지 안전대책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부터 점검반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활동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홍술 목사가 지난해 6월 4일 같은 곳에서 북한군에게 20여 분간 억류됐었다는 증언을 했는데 통일부는 지난 14일 국회 보고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국가정보원하고 현대 측에 물어봤는데 김 목사께서 진술하신 내용하고 사실이 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 박 씨 피살 이전에도 관광객들이 펜스 너머로 산책을 했고 심지어는 기생바위 근처까지 모터보트를 타고 갔다 왔다는 여러 진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건 단순히 보도일 뿐이고 아무도 진실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통일부 책상에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뭐 그렇게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아무도 진실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고인의 시신을 백사장에 방치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한 5시간 정도 됩니다.

○**윤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도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5시간 정도 되고요.

○**윤상현 의원** 예,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과다한 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관통 총상으로 시작된 참혹한 출혈에 대해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피해자 앞에 서 있던 자들이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던 인간으로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인지 몰라서 확인하느라 통보가 늦었다는 북측 해명은 거짓말은 물론 비열한 변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썄요,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이미 동이 터서 평범한 남한 관광객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간에 그것도 지장물이라곤 터럭 하나 없는 탁 트인 해변에서 여성을 향해 총질해 댄 걸 두고 감히 당연한 조치라

고 떼쓰고 그에 대해 또 대충 양해하고 넘어간다면 국제사회는 이 한반도를 인권이 없는 땅으로 조롱할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의 과잉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살인행위를 두고 과잉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년 부인 혼자서 다수의 무장 군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위해행위를 했기에 총질로 대응을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태 무마용 표현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것도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총격을 가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50대 중년 여성을, 무장도 하지 않은 여성을 뒤에서 군인이 총으로 쏘서 사망시켰다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북측은 “공포탄을 쏘고 서라고 했는데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선 목격자들에 의하면 단 2발의 총성이 있었는데 고인 역시 2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공포탄 발사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 도망을 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까? 그 지역 전부가 북한군 통제 지역 아닙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자기 집안에서 사살해 놓고 도망을 쳤다니 이게 사리에 맞는 소리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는 그 상황을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아주 진상조사 잘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러나 군인이 도망가는 여인을 총으로 쏘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됐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이번 일이 절대 우발적 총격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선 발사된 2발 모두가 명중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우발적이었다면 여러 발 쏘지 이렇게 단 2발로 정확히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둘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총성이 난 후 북한군 3명이 쓰러진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쏜 저격 결과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셋째, 그 후 그들은 그 참혹한 출혈 상태에 처

한 여성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려 5시간이나 파도치는 백사장에 방치했습니다. 즉 북한군은 이미 박 씨를 목표물로 노리고 사살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준사격을 했다는 게 맞는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조준 사격하였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상현 의원 동의하시지요?

목격자 이인복 씨의 증언에 의하면, 또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이 모 여인의 증언도 첫 번째 총성이 들린 뒤 여자의 비명소리가 났고 10초 가까이 지난 후 다시 총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통된 증언에 담긴 10초의 총성 간격입니다.

국과수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본 의원이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격수의 첫 번째 총알이 박 씨의 둔부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박 씨가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관통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해가 뜨는 방향이 바닷가 지평선 쪽이 아닌 우측 비치호텔 뒤의 높은 산 쪽이어서 박 씨가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닷가가 아닌 오른쪽 산 방향으로 돌아서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총알이 다행히 엉덩이 살 부분만을 지나가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북한군이 남한 관광객 1명을 확실히 사살하는 사살 계획 이외의 다른 어떤 사격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서 끝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포하는 것이 군의 경계근무 원칙으로도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현대아산을 통해 전한 설명과 말 바꾸기가 모두 철저한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졌던 박 씨는 고통 속에서도 힘을 모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0초간 힘겹게 몸을 일으킨 박 씨에게 날아든 두 번째 총탄이 등을 관통하며 확인 사살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사살 계획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첫 탄이 둔부에 맞았다면 두 번째 탄은 더더욱 쏘지 말았어야 하고 첫 탄도 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첫 탄은 둔부에 맞았고, 두 번째 탄은 등을 통해서 가슴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살은 군의 분석상 확실한 확인 사살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노동당 규약에 남한을 적화통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분명 통일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급기야 남한 여성 관광객임을 알면서도 동족의 등에 총질을 해 댔습니다. 이게 동족으로서, 정상적 군인으로서 할 짓입니까? 북측이 기회만 있으면 입에 올리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의 뜻이 민족끼리 등 뒤에서 총을 쏘자는 겁니까? 장관님, 이런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님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주적이냐, 아니냐의 표현에 관계없이 군에서는 북한이 분명한 우리의 현실적인 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6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제6위의 군사병력을 가지고 있고 1년에 27조 원의 국방예산을 쓰는 이유는 북한에 최대 이유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나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특히 대북관, 대적관이 해이되어 있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우리의 최대 위협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당연히 북한입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발행하는 국방백서, 가을에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결구럽다면 적어도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설명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군인은 물론 젊은 이들의 흔들리는 안보의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주적의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심대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실체인가에 관한 것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

이 어떤 불필요한 그러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모시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는 군끼리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194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왔지만 이런 참혹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우발적인 일이라면 이미 일어났어도 여러 번 일어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주변 정황에 불만을 품은 북한 군부의 돌출 행동이라는 해석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북한 군부를 모르는 너무나도 도식적·상투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중대한 도발은 권력 핵심부의 지시 없이는 결코 감행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금강산 관광지구를 지키는 군부대는 일종의 특수부대로 상부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이런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북한의 계획되고 준비된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가 지금 진상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고 자체에서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조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뒤에는 좀더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진의가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보기에 이런 계획된 도발의 배경에는 북한의 자신감 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북핵 불능화라는 개념은 1년 정도 지나면 핵시설의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가동 중지 정도의 개념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벌써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으로부터는 식량을, 중국으로부터는 비료를 지원받고 있고, 중유는 작년 2·13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40만 t 가량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공할 대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은 바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성 관광객 살해를 통해 계획적으로 대치 상황을 조성한 후에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

면서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굴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한미공조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런 현실을 돌파할 대책이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하나의 가설도 실현 가능한 가설일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 경제는 지금 일부 중유를 좀 지원받고 식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굉장히 침체해 있는 그런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이 불능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조금 얻고 식량 조금 얻었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북한이 기고만장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의한 남북대화가 하루속히 재개가 되어서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 협력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개성 관광 중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지금 금강산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의 안전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에 들어간 조사단이 관광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 금강산도 그렇고 개성 관광 관계도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개성에 관한 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은 지금껏 매사에 남의 탓만 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제와 뒤틀린 현실을 모조리 미국 탓,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60년을 그렇게 우겨 왔습니다. 그래도 그 원수인 한국과 미국은 그들이 달라는 것을 다 줬습니다.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고, 기름 달라면 기름 줬습니다. 달러도 달라기에 현찰로 실컷 줬습니다.

지금 북한에 월평균 250만 달러, 연간 3000만 달러의 거액을 안겨 주고 있는 것도 대북 관광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핵무기 만들

고 미사일 만들었습니다. 굶주려 죽어 가는 인민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세습 독재체제를 분칠하는 사치에만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와 거래의 미래를 의논하기는커녕 무고한 여성 관광객을 골라 등 뒤에서 무자비한 총질을 해 댔습니다. 그러고도 우리에게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북한의 실체입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절대 잊지 마시고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희상**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갑 출신 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무엇을……

○**백재현 의원** 우리 이명박 정부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을……

○**백재현 의원** 작년 연말 대선에서 이미 500만표 이상으로 이겼고, 지난 총선에서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고, 지방권력도 80%를 쥐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국민을 섬기는 정부기 때문에 국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재현 의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구태여 언론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딱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난주의 답변에 우리 구본홍, MBC 보도본부장까지 지내고 아주 출중한 사람으로서 적절하다, YTN 사장으로…… 그런데 YTN 노조나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

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반대할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아시겠습니까라는 그때 저의 답변은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는 것은 반대다. 그러나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중책을 못 맡는 것도 문제다’, 제가 그러면서, 구본홍 YTN 사장은 MBC에서 보도본부장까지 한, 방송계에서는 거물입니다. 그런 분이 YTN을 맡는다고 그러면 잘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희상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백재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홍 씨가 보도본부장…… 훌륭하고 출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그러나 그분은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러나 시민단체는……

○**백재현 의원** 잠깐만요.

언론사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낙하산 앉는 것이 언론의 공공성에 심각하게 위협을 가한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저는 보는데 총리님 동의 안 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구 사장은 임명된 뒤에 자기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구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노조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그렇습니다, 총리님.

그런 논리가 시민들한테 괜히 오해받고, 국민들한테 오해받을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연주 사장 임기 채워 주면 안 됩니까, 이제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국무총리 한승수** 정연주 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저희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그렇지요. 불과 이제 겨우 1년 6개월 남아 있는 임기를 채워 주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원한 여도 영원한 야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도 이미 여당에서 야당을 10

년 하고 다시 여당으로 왔어요. 우리 민주당도 야당을 죽 하다가 여당 10년 하고 다시 야당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계속 죽을 썬면 5년 후에 정권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잘하면 한 10년 가지만 세 번, 네 번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구태여 무리하게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끌어내려서 KBS를 하나의 정권 홍보용으로, 하나의 나팔수 역할로 쓰려는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줄 압니다마는 ‘구본홍 사장을 노조가 반대하니까 임명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KBS 노조도 정연주 사장을 반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8일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법에 맞는 얘기인가요?

○국무총리 한승수 글썄,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총리, 똑바로 대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백재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라는 분이?

○국무총리 한승수 비서관 가운데도 혹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 것이 그냥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재현 의원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의 100% 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는 공공재예요. 어느 하나 권력을 위해서 쓰는 재화가 아닙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PD수첩’과 관련해서 총리님께서서는 ‘PD수첩’ 보도가 광우병에 대한 하나의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됐던 것처럼 말씀하셨고, 하나 더 물어본다면 ‘PD수첩’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 시작이 농수산식품부 명예훼손죄로 시작이 됐다면서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농수산부에서 아마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어떤 정부가, 방송의 프로그램을 고소하는 사례가 선진국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얼마나 그 방송의 내용이…… (장내 소란)

얼마나 그 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문제가 이렇게 커졌으면 농수산부에서 고소를 했겠습니까?

○백재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지금도 촛불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쇠고기 협상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건 국민의 자존심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사람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돈 주고 사먹으면서 왜 그보다 못한 고기를 먹느냐는 국민의 자존심이 핵심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국무총리 한승수 그것도……

○백재현 의원 ‘PD수첩’의 다우너 소 나온 것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인식을 파악하고 문제가 뭐인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MBC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한 것은 세 분야에 걸쳐서 사실입니다.

○백재현 의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건강대란,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대란에 이어 외교 급신과 남북관계 불신이 불러온 외교 분란까지 현 정국은 참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불러온 인재입니다. 7% 성장률에 대한 조급증이고 물가를 불러왔고 국민건강권마저 내준 졸속협상이 촛불 정국의 배경입니다.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무리한 의욕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더니 급기야 금강산 총격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권 침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에

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감각을 가진 외교와 남북협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금강산 총격 사건과 일본의 도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지난 7월 11일 날 우리 개원식에 함께 계셨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백재현 의원 3시 쯤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를 오전 답변에서 들었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 50분 전에 총격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그 내용을 대북관계와 관련된 발언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대북 관계 개선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총격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남북 당국 공동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아마 참모들하고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발표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를 언급하는,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과 필요 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좋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국회 연설에서 하셨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번 총격사건을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연설처럼 남북 당국 간 전면

적인 대화가 재개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예, 동의합니다.

○백재현 의원 이게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짓고 나면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대로 갈 수 있도록 진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그 전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확실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다음은 일본, 독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면 미국과는 쇄고기 문제를 일으키더니 부시 대통령과는 방한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과는 중국 외교부와 한·미·일 동맹 체제를 비판하는 논평으로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과거 없는 미래만을 강조했고 독도 사태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번 독도 사태와 관련해서 아시아 주변국이나 다른 나라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국무총리 한승수 제3국은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틀림없이 한국의 이와 같은 입장을 잘 이해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그러면 우리의 동맹외교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미국도 한국 측도 일본 측도……

○백재현 의원 지난 14일에 국무부 대변인은 독도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게 옳은 대답일까요?

○국무총리 한승수 우리로서는 불만족스럽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3국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백재현 의원 중립적인 시각이라고 보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3국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

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백재현 의원** 이번 독도 사태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미일 편향적인 동맹외교, 역사 인식 없는 실용외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한승수** 저는 그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독도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와 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독일의 예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철저한 자기반성은 독일 혼자 힘으로 해낸 것은 아닙니다. 주변국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감시 견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이 주변국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일본의 과거사와 현재 상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하고 일본을 감시 견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한승수**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세계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두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드골이고 또 한 사람은 아덴아워입니다. 아덴아워 독일 수상이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에도 아덴아워 못지않은 이와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총리님, 앞으로 독도의 문제는 정책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 한반도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외교가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변영태 장관이 독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전에 죽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내용들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

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 우리 총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고립되는 외교가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을 고립시키는 외교가 되도록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세력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외침에 시달려 왔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 대국의 이해가 얹혀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한미 동맹외교는 잘못된 쇄고기 협상으로 촛불정국을 불러왔고 한일 실용외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동맹외교, 실용외교는 밖으로 내놓고 할 외교가 아니고 내실 있고 조용하게 추진할 외교입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 미·일·중·러의 균형 잡힌 외교가, 자주에 대한 분명한 외교가, 남북협력 외교가 한반도를 지켜내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백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3일째 긴급현안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스스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장의 분위기나 질서나 이런 것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의원님의 숫자만 하더라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에 107명, 둘째 날에는 1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현재는 149명입니다.

의장석에서 의원님 여러분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일동 웃음)

방청석에서 보시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긴급현안질문이 이틀 더 남았습니다. 그때는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의원(283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용 석	강 운 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홍 길	공 성 진	곽 정 숙	구 분 철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립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노 식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수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효 재	김 회 철
나 경 원	나 성 립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국 현	문 학 진
문 회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돈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서 청 원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해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두 환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광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달 곤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무 영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성 현	이 시 종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삼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선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정 희	이 종 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두 성	임 영 호	임 태 회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전 현 회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결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문 순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옥 철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추 미 애	한 선 교	허 범 도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경 병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장 표
홍 재 형	홍 정 옥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5인)

김 세 웅	양 정 례	이 애 주	이 종 결
이 해 훈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한승수
통일부장관	김하중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	-----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도재문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법 및 국회상임 위원회 위 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	윤상현	황영철	한나라당	2008. 7. 21.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광림	한나라당	2008. 7. 18

○의안 제출

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박은수·백원우·곽정숙·양승조·강창일·김희철·우제창·김종률·장세환·윤석용·이정선·최영희·이용삼·김충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강기갑·강창일·곽정숙·권영길·김낙성·김동철·김영진·김재윤·김종률·류근찬·변재일·오제세·유선호·유성엽·이정희·이진삼·최인기·홍희덕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강기갑·강창일·곽정숙·권영길·김낙성·김동철·김영진·김재윤·김종률·류근찬·변재일·오제세·유선호·유성엽·이정희·이진삼·최인기·홍희덕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김재경·김태환·김정권·박준선·최구식·김성희·정갑윤·이한성·양정례·이진삼·김성태·김태원·정양석·최인기·

박종희·강석호·박대해·황우여·이해봉·이정선 의원 발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강기갑·강창일·곽정숙·권영길·김낙성·김동철·김영진·김재윤·김종률·류근찬·변재일·오제세·유선호·유성엽·이정희·이진삼·최인기·홍희덕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이윤석·우윤근·주승용·김성곤·최인기·송민순·송훈석·조영택·강창일·김부겸·허범도·변웅전·김영록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심재철·김태원·정희수·구본철·손범규·황영철·임해규·정해걸·강명순·박종희·이정선·김성태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심재철·김태원·정희수·구본철·손범규·황영철·임해규·정해걸·강명순·박종희·이정선·김성태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 2008. 7. 18 정부 제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박상은·김동성·김성곤·김성희·이애주·조정식·송민순·안정률·구본철·신학용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곽정숙·홍정옥·정하균·이진삼·김성곤·박은수·이한성·김성태·김희철·강기갑·홍희덕·권영길·이정희 의원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강석호·송영선·이철우·김일윤·

이한성 · 강길부 · 안상수 · 고승덕 · 정희수 ·
안경률 · 이병석 · 김성태 · 이낙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8 김영선 · 김성수 · 유성엽 · 유기준 ·
안상수 · 김태원 · 구본철 · 신상진 · 강석호 ·
박종희 · 홍장표 · 김종률 · 안효대 · 이진삼 ·
이한성 · 송광호 · 유재중 · 황우여 · 김성곤 ·
이해봉 · 박대해 · 김영우 · 양정례 · 홍일표 의
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
표발의)

(2008. 7. 18 신상진 · 유성엽 · 이한성 · 양정례 ·
구본철 · 정양석 · 안홍준 · 안상수 · 이진삼 ·
박대해 · 박종희 · 정하균 · 황우여 · 나성린 ·
정영희 · 김우남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8 신상진 · 장세환 · 유성엽 · 이한성 ·
양정례 · 구본철 · 안상수 · 김소남 · 이진삼 ·
박대해 · 박종희 · 강석호 · 정하균 · 황우여 ·
이해봉 · 이경재 · 김우남 의원 발의)

모바일산업진흥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김태환 · 정희수 · 이철우 · 이한구 ·
홍장표 · 서상기 · 조원진 · 이명규 · 김성조 ·
배영식 · 이해봉 · 강석호 · 홍사덕 · 현기환 ·
정해걸 · 주호영 · 이인기 · 권영세 · 박보환 ·
윤두환 · 조문환 · 조진래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
표발의)

(2008. 7. 18 오제세 · 변재일 · 신상진 · 송광호 ·
양승조 · 안상수 · 손범규 · 장세환 · 이한성 ·
정하균 · 유성엽 · 김부겸 · 양정례 · 박상돈 ·
최문순 · 김종률 · 이진삼 · 이해봉 의원 발의)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
지역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

(2008. 7. 18 김소남 · 김일윤 · 김정권 · 진영 ·
임두성 · 현기환 · 이경재 · 황우여 · 박종희 ·
강명순 · 정양석 · 정갑윤 · 배은희 · 허원제 ·
강석호 · 안형환 · 윤두환 · 강성천 · 신상진 ·
이성현 · 원희목 · 안효대 · 허태열 의원 발의)

이상 2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8. 7. 18 심재철 · 김태원 · 정희수 · 배영식 ·
구본철 · 손범규 · 강명순 · 황영철 · 임해규 ·

정해걸 · 박종희 · 이정선 · 김성태 의원 발의)

7월 21일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에 회부

○추천의뢰서 제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추천의 건

(2008. 7. 18 정부 제출)